

# 尹 취임식 슬로건 '다시 대한민국!'...BTS 초청 안한다

## 尹 당선인 강조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고려 엠블럼 '동심결'...“태극의 역동성과 영원함 상징”

오는 5월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다.

취임식에는 각국 외교사절과 주요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윤 당선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할 계획인 가운데 당초 취임식 공연이 검토했던 방탄소년단(BTS)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박주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취임준비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동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전해드리는데 대해 고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고려했다는 게 취임준비위의 설명이다.

엠블럼은 전통매듭인 '동심결'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확정됐다.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동심결은 태극의 역동성과 무한의 영원함을 상징한다.

이도훈 총감독은 "동심결은 그간 과거 모든 영근 갈등을 풀어 국민의 마음을 묶고 연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하나로 묶어 새 대한민국을 약속하고 초청된 외빈까지 하나로 묶는 감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을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감독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품격을 알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감격으로 있는 행사로 기획한다"며 "허장성세, 겉으로만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의미있고 내실있는 행사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취임식이 열리는 10일 0시에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열린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당선인이 국립헌법원을 찾아 참배한 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의사당 앞마당으로 이동한다. 오후에는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취임식에는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각국 고위급 사절단과 주요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취임준비위는 전례를 고려해 해외 각국

에서 파견한 고위급 경축 사절과 재외동포 참석도 추진 중이다.

미국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참석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전·현직 국가원수나 수반에 대해서는 상호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이 이뤄진다"며 "그 분들이 희망하거나 외교사절을 통해 참석 의사를 보인다면 정중히 모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외국 전·현직 장관급을 비롯해 고위급들이 간접적으로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며 "우리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할 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오는 12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사저를 방문해 취임식 참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위원장은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 회동 시 이뤄질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면 국민통합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당선인이 정중히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준비위는 당초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취임식 공연에 초청하는



박주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동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취임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러 이유를 고려해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 행사가 조촐하지만 내실 있고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등등 무명 스타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진정한 국민이 화합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당선인이 말씀하셨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세계적 아이돌 스타를 모시는 데는 예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임준비위는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해 오는 14일까지 국민 취임식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초청 여부는 오는 29일 확인할 수 있다.

취임식에 참석할 국민 구성에 대해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무한정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 초청할 것"이라며 "아직 청년 등 초청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시정부 수립일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을 맞아 "민주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국민의 삶이 풍요로운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용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낮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

국의 변명과 풍요는 3·1운동을 일으키고 임시정부를 수립했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의로운 기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임시정부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해 민주공화제, 삼권 분립, 시민 평등, 언론의 자유 등을 보장한 임시 헌장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며 "임시정부의 헌장은 헌법으로 계승됐고, 그 법통은 대한민국 정부의 근간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막고 국민께서 주권자로서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공화국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임시정부의 정신을 시대에 걸맞게 혁신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오유나기자

## 국힘 “검수완박, 이재명 비리 방탄법...사실상 대선불복”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왼쪽) 법사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 추진 움직임'을 "권력에 짓눌려 중단됐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와 대선 기간 드러난 이재명 전 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씨 비리 수사를 막아 거약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포"고

### “각종 권력 비리와 이재명·김혜경 면죄부”

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같이 말한 뒤 "오로지 '이재명 비리 방탄법'으로 작동하게 될 검수완박 추진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개편한다면 국가와 국민 앞에 씻기 어려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자당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총량이 줄어든다' 내용의 편지를 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받는 형사피고인이 입법권으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권력형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선포"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수완박을 주장하는데,

수사팀에서 11차례나 무혐의 결론으로 처분하려 했지만 '친정권 검찰 수뇌부'에 의해 번번히 처분이 지연됐다"고 보며 "그것이 검수완박의 이유라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기본권 보장' 역시 가당찮은 궤변"이라며 "검정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큰 변경도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변형과 민변 모두 '경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피해가 없도록 기존 제도를 점 검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명분이나 당위성 어느 하나도 없다"며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체도는 당리당략에 의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민의 권익만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